

[기자회견]

촛불혁명을 노동자후보 선택으로 완성합시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 .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민주노총
(지지)후보 및 공동요구안, 서울지역후보 및 진보정당 후보 발표-

I. 개요

- 일시 : 2018. 5. 29(화) 11시
- 장소 : 광화문세월호광장

II. 순서

- 여는말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최은철 본부장

○ 진보정당

-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비례후보
- ♣ 민중당 조영란 서울시 비례후보
- ♣ 노동당 유검우 서초구3 시의원후보
- ♣ 녹색당 이주영 강남구청장 후보

○ 기자회견문

- ♣ 정의당 오승희 비례후보 (관악구 비례후보)
- ♣ 민중당 박희진 후보 (서대문구 가 선거구)
- ♣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대전시 비례후보)
- ♣ 녹색당 나익수 후보 (마포구 아 선거구)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 !!

- 2018년 민주노총 지방선거 6대 요구 24대 과제

- I. 민주노총 지방선거 공동 요구 기초
- II. 지방선거 공동 요구 요약
- III. 민주노총 지방선거 공동요구 세부 내용과 해설
 1. 광장에서 지역으로 -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할권리 보장 확대
 2. 광장에서 지역으로 - 우리 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3. 광장에서 지역으로 - 최저임금준수,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권 보장
 4. 광장에서 지역으로 -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
 5. 광장에서 지역으로 -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6. 광장에서 지역으로 - 지역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

2018.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작성 : 민주노총 정책실, 노동안전실. 02-2670-9110. kctu1102@gmail.com
 -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 민주노총 지방선거 공동 요구 기조 - 광장에서 지역으로!!

- 2018년 6월 1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서 17개 광역시도, 260개 (226개 자치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내 2개시 32개 구)의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 광역의원 정수 690명, 자치구 및 시.의회의원 총 정수는 2,927명이며 세종 특별자치시 의원은 16명, 제주특별자치도는 43명을 의원정수로 하는 선출인원 대비 최대 규모의 공직선거임.
-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중앙차원의 정책의제와 더불어 시.군.구 단위 현장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지역의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를 확산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촛불혁명 과정에서 분출된 사회개혁 요구와 노동개혁요구를 지역과 현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고자 함.
- 그간 노동정책의제는 전국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지닌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음.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를 노동정책 개선요구를 전국 각 지역단위로 확장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을 주 슬로건으로 하여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할권리 보장 확대 △우리 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최저임금준수,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권 보장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지역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 등 < 6대 핵심 요구 24대 정책의제 > 를 제출함.

II. 지방선거 공동 요구 요약

1	<p>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 할 권리 보장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정교섭(정책협외) 정례화.실질화 2.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용자 책임성 강화 3. 노동정책 총괄 국(실) 설치 4. 노동존중,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례제정 5. 노조 설립신고 적극 접수, 노동적폐 청산
2	<p>우리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민간위탁(간접고용) 철폐, 직영전환 공공서비스 질 향상 3. 노동권 사각지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호
3	<p>최저임금준수·생활임금제도입으로 노동권보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 3.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아름다운 연대
4	<p>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2.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3.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4.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5. 화학사고·발암물질 없는 지역 만들기 6. 안전한 학교 만들기
5	<p>광장에서 지역으로 -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운영 2. 돈보다 생명 -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공공성 강화 3.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 4. 우리 지역 안전 먹거리 - 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6	<p>광장에서 지역으로 - 지역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자체내 여성 일자리 정책 전담부서 설치 2. 지자체내 양질의 여성일자리 중단기 계획 수립 3. 시민의 손으로 성차별·성폭력 없는 일자리 만들기

1.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 할 권리 보장 확대 !

노조할권리는 헌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이면서 국제노동기준과 인권협약에 따른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할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정하거나 관련한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임. 노조할권리는 노동권의 항상적인 보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인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권리 보장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함.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 촛불혁명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제기된 노동개혁 요구와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교섭(정책협약) 정례화.실질화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용자 책임성 강화 △ 노동정책 총괄 국(실) 설치 △노동존중,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례제정 △ 노조 설립신고 적극 접수, 노동적폐 청산 등을 요구함.

2. 우리 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사회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임. 전체노동자 1900만명 중 비정규직이 천만 명을 넘어서는 위험한 상황. 지방정부가 지역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특히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제고해야 함. 먼저 지역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교섭을 제도화하고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을 확립해야함. 또한 20년 동안 확대해온 민간위탁업무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행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수많은 공공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초래되는 부정비리문제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혈세낭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등을 전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업무 전수조사를 진행, 직영화해야 함.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전환과 민간위탁 철폐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정비리근절,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실현해야 함.

3. 최저임금준수 · 생활임금제도입으로 노동권보장과 사회적 연대 !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5만 2천명(13.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임. 생활임금제는 2018년 1월 현재 243개 지자체(광역시·기초) 중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도개선이 필요.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및 생활임금제 확산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촉구함.

4.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 !

화학사고, 버스 터미널 및 유통매장의 각종 사고는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직결되어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지자체는 공무원 및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직접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등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선도할 것을 요구함.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발암물질,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화학 산단,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예산배정 및 대책을 수립 이행 할 것을 요구함. 아울러, 안전한 지역을 위해 각종 안전대책과 감독에 노동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함.

5.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

지역사회 복지 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임.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성은 공공지출 규모로는 OECD 절반 수준이며, 복지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민간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해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의료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 기준 국공립 비중 40% 달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복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민주노총은 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운영 △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대 및 의료 공공성 강화 △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 △ 우리 지역 안전 먹거리 - 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을 요구함.

6. 광장에서 지역으로 - 지역에서 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 !

한국 사회 여성일자리 특징은 산업별, 기업별로 성별화 되어 10년을 일해도 경력 인정되지 않는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승진과 발전이 막힌 사다리 없는 일자리임. 특히 지자체는 여성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행정 보조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이 조차도 안정화되지 않음.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과에는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없기에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함. 민주노총은 지역에서부터 여성에게 양질의 사다리 있는 일자리를 형성하기 위해 △ 지자체내 여성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내 여성일자리 중단기 계획 수립 △ 시민의 손으로 성차별, 성폭력 없는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함.

후보 현황(2018.5.29현재)

	지역	소속	성명	지역	선거구	구분
1	서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2	서울	노동당	유검우	서초구	3선거구	후보
3	서울	민중당	박병화	서울시	광역비례	후보
4	서울	민중당	조영란	서울시	광역비례	후보
5	서울	민중당	김종민	서울시	3선거구	후보
6	서울	민중당	이승무	금전구	라 선거구	후보
7	서울	정의당	양성윤	양천구	양천구청	후보
8	서울	공공운수서울(정)	오승희	관악구	기초비례	후보
9	서울	금속노조(정)	김희서	구로구	바 선거구	후보
10	서울	아시아나항공(정)	권수정	서울시	광역비례	후보
11	서울	녹색당	이주영	강암구	강남구청	지지후보
12	서울	녹색당	김영란	서울시	광역비례	지지후보
13	서울	녹색당	나익수	마포구	아 선거구	지지후보
14	서울	녹색당	김민수	은평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15	서울	녹색당	이상희	은평구	아 선거구	지지후보
16	서울	민중당	김나영	서울시	광역비례	지지후보
17	서울	민중당	소순관	서울시	광역비례	지지후보
18	서울	민중당	임승현	서울시	광역비례	지지후보
19	서울	민중당	최계연	서울시	광역비례	지지후보
20	서울	민중당	최재희	서울시	4선거구	지지후보
21	서울	민중당	홍기웅	서울시	1선거구	지지후보
22	서울	민중당	전진희	서울시	1선거구	지지후보
23	서울	민중당	권오혁	서울시	1선거구	지지후보
24	서울	민중당	성치화	서울시	4선거구	지지후보
25	서울	민중당	이상혁	강북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26	서울	민중당	최유리	강북구	나 선거구	지지후보
27	서울	민중당	김성일	강북구	라 선거구	지지후보

28	서울	민중당	이미선	강서구	자 선거구	지지후보
29	서울	민중당	송명숙	관악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30	서울	민중당	김한영	관악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31	서울	민중당	연시영	관악구	사 선거구	지지후보
32	서울	민중당	변은혜	광진구	라 선거구	지지후보
33	서울	민중당	이근미	구로구	라 선거구	지지후보
34	서울	민중당	강미경	노원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35	서울	민중당	이강현	노원구	나 선거구	지지후보
36	서울	민중당	엄재영	노원구	다 선거구	지지후보
37	서울	민중당	김선경	노원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38	서울	민중당	윤미연	동대문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39	서울	민중당	김지영	마포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40	서울	민중당	박희진	서대문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41	서울	민중당	김한주	서대문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42	서울	민중당	정종성	성북구	나 선거구	지지후보
43	서울	민중당	박지선	송파구	차 선거구	지지후보
44	서울	민중당	박대윤	영등포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45	서울	민중당	이윤진	영등포구	사 선거구	지지후보
46	서울	민중당	김은희	용산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47	서울	민중당	이소영	종랑구	사 선거구	지지후보
48	서울	정의당	윤성일	마포구	마포구청	지지후보
49	서울	정의당	정재민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지지후보
50	서울	정의당	남 일	강남구	다 선거구	지지후보
51	서울	정의당	정민희	강남구	기초비례	지지후보
52	서울	정의당	권대훈	강동구	바 선거구	지지후보
53	서울	정의당	김일웅	강북구	나 선거구	지지후보
54	서울	정의당	김주혁	강서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55	서울	정의당	문대영	강서구	자 선거구	지지후보
56	서울	정의당	김수정	관악구	다 선거구	지지후보

57	서울	정의당	박정열	관악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58	서울	정의당	왕복근	관악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59	서울	정의당	이기중	관악구	아 선거구	지지후보
60	서울	정의당	김주현	광진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61	서울	정의당	빈재욱	광진구	라 선거구	지지후보
62	서울	정의당	박미경	노원구	라 선거구	지지후보
63	서울	정의당	주희준	노원구	바 선거구	지지후보
64	서울	정의당	윤 오	도봉구	나 선거구	지지후보
65	서울	정의당	오정빈	동대문	라 선거구	지지후보
66	서울	정의당	이호영	동작구	사 선거구	지지후보
67	서울	정의당	조영권	마포구	바 선거구	지지후보
68	서울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69	서울	정의당	권태훈	서초구	라 선거구	지지후보
70	서울	정의당	김진욱	서초구	기초비례	지지후보
71	서울	정의당	주세훈	성북구	나 선거구	지지후보
72	서울	정의당	안숙현	송파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73	서울	정의당	배성용	양천구	다 선거구	지지후보
74	서울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	마 선거구	지지후보
75	서울	정의당	이원영	용산구	나 선거구	지지후보
76	서울	정의당	조햇님	은평구	라 선거구	지지후보
77	서울	정의당	정혜연	서울시	광역비례	지지후보
78	서울	민중당	변은혜	송파울	국회의원(보궐)	지지후보
79	서울	민중당	김성민	서울송파	4선거구	지지후보
80	서울	민중당	신혜원	강남구	다 선거구	지지후보
81	서울	민중당	천창영	도봉구	가 선거구	지지후보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지지후보 현황(2018.5.29현재)

조직명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지지후보														계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무소속	교육감		종합			
	후보	지지	후보	지지	후보	지지	후보	지지	후보	후보	지지	후보	지지		
서울본부	1	-	-	5	4	36	4	30	-	1	-	10	71	81	
인천본부	-	2	-	1	2	2	1	18	-	-	1	3	24	27	
경기본부	1	1	1	2	15	19	1	9	-	1	-	19	31	50	
충북본부	-	1	-	2	3	-	-	11	-	1	-	4	14	18	
대전본부	-	-	-	-	3	1	2	5	-	1	-	6	6	12	
충남본부	-	-	-	-	3	2	2	6	-	-	-	5	8	13	
전북본부	-	1	-	2	2	9	2	16	-	-	1	4	29	33	
광주본부	-	1	-	1	7	23	1	11	-	-	-	8	36	44	
전남본부	-	-	-	-	12	15	4	18	-	-	1	16	34	50	
대구본부	-	-	-	-	2	4	-	5	-	-	-	2	9	11	
경북본부	-	-	-	1	3	5	-	7	5	-	1	8	14	22	
부산본부	-	2	-	2	6	15	1	7	-	-	-	7	26	33	
울산본부	2	2	-	-	17	16	4	6	-	-	1	23	25	48	
경남본부	3	-	-	-	12	8	8	9	-	1	-	24	17	41	
강원본부	2	-	-	-	1	4	2	4	2	-	1	7	9	16	
제주본부	2	-	-	3	-	2	-	5	-	-	-	2	10	9	
후보.지지	11	10	1	19	92	161	32	167	7	5	6	148	362	511	
정당별	21		20		253		199		7	11		148	362	511	

[기자회견문]

촛불혁명은 노동자 후보의 선택으로 완성된다!

2년 전 겨울 바로 이 자리, 광화문 광장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분노와 희망이 용광로처럼 녹아들어 뜨겁게 달구어졌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패한 정권을 종식시켰으며,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인류역사에서 새로운 혁명의 방법을 실험하고 또 성공하였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성공은 단순히 중앙정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척폐청산이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재벌들의 갑질은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당연시 되어 온 것이 촛불혁명 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욱이 촛불혁명의 최대 수혜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수구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는 조삼모사식 법률을 개악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결국 재벌과 수구야당을 등에 업고 수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박근혜 정부와 자본이 그토록 바라던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아무런 책임감 없이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87년 개헌 이후 단 한번도 손대지 못한 헌법개정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세기를 넘어 21세기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헌법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법조문에 지나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을 외치는 그 어떤 위정자도 낡은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8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헌법’을 선언하고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보수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개헌은 물건너 가버린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적폐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

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자와 취업청탁이라는 몰염치한 범죄를 저지른 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다. 이는 동업자 의식을 넘어서 집단적인 범죄행위이다. 적폐청산이 시대의 요구인 상황에서 벌어진 국회의 파렴치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놀랍지도 않다.

이제 당면한 적폐청산의 목표는 확실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기를 등에 업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권과 당리당락에만 사로잡혀 있는 의회 권력의 교체만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촛불의 불씨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 이어오고 있는 노동당 . 녹색당 . 민중당 . 정의당의 진보후보, 진보교육감 후보, 궐위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진보 국회의원 후보를 서울시민의 손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며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동력을 얻는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민주노총은 서울지역에 81명의 후보를 포함하여 전국 511명의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결정하였다. 80만 조합원들의 실천투쟁과 골목골목을 누비는 진보정당 후보들과 함께 지방 행정부, 지방의회의 진보적 교체를 호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촛불시민들이 명령한 의회 적폐청산과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과 다음의 요구안을 제시한다.

- ▲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과 노조 할 권리 보장·확대하라
- ▲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지방정부부터 실천하라
- ▲ 최저임금준수,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라
- ▲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라

2018년 5월 29일

613 동시선거 민주노총 (지지)후보 및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